



## 주간 지방정부 뉴스&이슈 브리프

- **서울 송파구,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공요금 사용료 특별조사**
  -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요금을 조사해 부조리에 대한 개연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
  - 조사대상 공공요금은 전기료, 수도료, 난방비(급탕비포함)이며, 사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실태 파악 예정
- **서울 강동구, 초교 24학급, 중학교 18학급, 반려동물 양육자 200명 등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동물학교' 운영**
  - 반려동물, 야생동물, 동물원 동물 등 동물의 특징을 비교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토론 시간을 가지며 퀴즈와 보드게임, 버드 셰이버(조류충돌 방지 스티커) 만들기 등 참여형 수업으로 구성
- **경기 용인시, 수지구 풍덕천동에 '돌출형 버스승강장' 시범설치**
  - 돌출형 버스승강장은 노상주차가 허용된 구간의 승강장을 차도 쪽으로 돌출시켜 보도를 넓힌 것으로 버스 승객의 승·하차시 사고위험 감소 및 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없애 버스의 승강장 진입이 수월
- **경기 안양시, 새 학기부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준공영화 사업 본격 시행**
  -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어린이 부모들이 부담했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여 어린이집 선택권을 넓히고, 누리과정 없이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월 5만원 영아반운영비를 지원
- **부산 연제구, 직장맘을 위해 '영유아 간병서비스' 추진 (2016년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통해 선정)**
  - 병원야동보호사는 직장맘을 대신해 질병이 있거나 병원 치료를 앞 둔 아동의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주고 아동 환자의 회복을 돕는 아동전문 간병사이며 저소득가정에는 무료서비스 지원
- **강원 태백시, 단체관광객 유치에 무료 셔틀버스 운영**
  - 기차를 타고 태백산도립공원 찾는 단체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지원
  - 중부내륙 관광열차와 백두대간 협곡열차 등을 이용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학교 등에 지원될 셔틀버스 지원금은 1대당 20만원씩 관련 예산액 2,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
- **경상북도, '경북형 한옥'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한옥 보급 확산에 나설 계획**
  - 경북형 한옥 모델 개발과 관련, 지난해 6개를 만들었고 20~30개 모델을 추가하여 기, 단, □자형과 □자 확장형을 기본 모델로 정했으며 향후 크기와 평면을 다양화해 실제 보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경북형 한옥 모델 최종 선포식과 함께 대대적인 경북형 한옥 보급 확산에 나설 방침
  - 도내 우수 한옥건축물과 새로운 한옥을 더 늘리기 위해 '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' 제정
- **전라남도,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지침에 따른 문제 예방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본격 추진**
  - 해당 기관이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전남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 의견을 제시해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면책제도를 활용해 처분 완화
  - 사전 컨설팅감사제도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는 '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' 제정안 2016년 3월 7일 입법예고

##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

-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 입법예고 / 행정자치부 / 2016. 3.
  -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  -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,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도록 신청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
  - 행자부는 "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를 개선할 것"이라고 밝힘
-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/ 국토연구원 / 2016. 3.
  -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2003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·양적 팽창방식으로 확산되어 왔지만, 지속적으로 조직의 자생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문제가 제기됨
  -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성과를 지역공동체와 공유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  -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사업 관련 조직과의 연계활동 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 확대,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성 점검 시스템 마련,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·확산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방안 필요
- 경기도 고령친화형 마을 만들기 기초연구 / 경기연구원 / 2015. 12.
  - 장래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이 복지시설에 수요와 미스매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
  - 고령자를 위한 수요는 많지만 복지 및 편의시설의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대비책으로는 기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전문화된 분야별 고령친화마을 코디네이터 지원, 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홈케어링 시도, 고령자에게 특별히 할인해주는 노인할인요일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
  - 유관부서와 기관간의 협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유사하게 고령친화점검단을 민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고령친화마을이나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판단
-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과제 / 민주정책연구원 / 2016. 2.
  -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획정 시한을 105일이나 넘겼으며, 무엇보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를 초래한, 최악의 선거구 획정의 사례
  -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시기 및 구성 방식 개선과 국회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처리 지연 방지가 필요하며 정파적 고려에 따른 지연이나 법안 연계 처리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, 자동 획정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, 19.4%(1,610개 단지) 부적합 / 국무조정실 / 2016. 3.
  - (외부 회계감사) 2015년 시행 첫해에 감사대상 9,009개 단지 중 99.8%인 8,991개 단지를 실시한 결과, 19.4%인 1,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
  - (지자체 합동감사) 전국 429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, 이중 72%인 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, 공사 수의 계약 부조리 등 1,255건 적발
  - (경찰 특별단속) 최근 3개월 99건 단속, 43건(153명) 입건, 56건 수사 중
  - 관계기관 협업 통한 상시 감시 강화,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등 주민 관심도 높여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 예정